

“흠 다시 만져보자”...광주·전남서 제78주년 광복절 행사

광주시,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초청 광복절 경축식
 전남도, ‘독립전쟁사’ 사진전 열어 광복 의미 상기
 민간 강제노역 피해자 사진전·봉오동 전투 재현도

광주·전남에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내가 꿈꾸는 광복’을 주제로 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경축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오연인 할머니와 이춘식·이경석 할아버지 등 4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광복회광주시지부장이 대독하는 광복회장의 기념사,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 경축사, 빛고을맨서스의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강제노역 문제를 언급,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의 꿈은 온전한

사직이고 합당한 배상”이라며 “누구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해를 강요할 수 없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같은 날 오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 고(故) 남상홍 선생의 자녀 남점지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달했다. 광복회 박동환·윤준식·이재현 씨는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날 도청 1층 우선도호에선 직원들이 핸드프린팅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전시하고, 자유와 독립을 향한 민족의 여정을 담은 ‘독립전쟁사’ 사진전을 열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선열들이 광복을 통

해 무엇이든 함께 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대중정신과 자신감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겼다”며 “우주항공, 이차전지, 데이터와 바이오 등 최첨단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78년 전 선열들의 희생으로 다시 찾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간 차원에서 광복절을 기리는 행사도 이어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시청 1층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에 양 할머니 등 광주시의 광복절 행사에 참여했던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질곡어린 세월을 떠올리며 일본의 사회와 배상을 촉구했다.

미쓰비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 이행 대신 국내 기업이 대신 이틀 갚아주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차 변제안’에 대해서도 ‘받지 않는다’는 그간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양 할머니는 “(제3차 변제안으로 마련된) 그런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며 “남은 생 단 하나의 소원은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구 광주고려인마을은 1920년 흥병도 독립군 장군이 중국 지린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를 물총 축제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형식으로 재연했다.

고려인마을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행사는 행진과 연극 관람 등을 통해 조상 독립군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고려인마을 목사는 “독립군은 고려

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한핏줄인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다”며 “독립운동에는 너나 구분이 없었던 영예로운 조상들의 뜻을 기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설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변용일기자

광주교사들 “학교현장, 교권보호전담팀 가장필요”...교육감 건의

이정선 교육감,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간담회



광주지역 교사들이 “교권보호 전담팀이 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이정선 교

육감에게 건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과 유·초·

중·고·특수학교 15명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교육과 학부모 관계 사이에서 비롯된 교권 피해 사례 등을 이야기했으며 교권보호 대책” 등을 제시했다.

교사들은 우선 “학부모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 1명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며 “실제적이고 범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즉각 분

리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서부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해당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교육 강화, 학생 생활교육 세부 매뉴얼 개발, 전문상담인력 학교 추가 배치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 교사들은 “유아와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유치원과 특수교사는 특수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교권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슬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임종 국정 공백 없도록 가족장”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지를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故 윤기중(92)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평생 소독과 부의 분배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로 경제 현상을 통계학으로 해석하는 분야에서 간간히 눈을 사로잡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